

## 국내 기술의 結晶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



金 尚 憲 / (株)豊山 社長

우루과이 라운드(UR), 리우 등 對外적인 면이나,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해나갈 活路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자위력의 현주소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때 우리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位相 재정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및 지원 意志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때 지난 7월 1일 성황리에 열렸던 「방위산업大토론회」에서 발표되어, 국내 기술의 결정(結晶)인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의 맥(脈)을 직시(直視)하였던 이 내용을 특집의 일환으로 수정하여 전재(轉載)합니다

특히 이날 방산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金 尚 憲 (株)豊山社長은 『본인이 비록 방산업계를 대신하여 토론에 참석하고 있으나, 모든 방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할수는 없을 것이며, 발표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당국자의 깊은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의 안보상황은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유동성과 가변성을 지닌 위기의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지난 6월 4일자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가상 시나리오를 보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현실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전망은 민족적 염원과는 달리 어떠한 낙관도 기대할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 통일을 실현한 후에 우리와 국경을 맞대게 될 주변국들은 군비증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처하고 있는 안보상황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 방위산업의 중요성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기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은 아무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국가안보를 담보하여 대체될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발전은 선택의 문제지만, 국가안보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단 1%의 불확

실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 시점이야말로 그 어느때 보다도 새로운 시각에서 방위산업이 육성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안보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실제로 약 20여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기본병기의 완전자립 생산체제를 구축하였고, 고도정밀병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완벽한 군수지원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무기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무기구매시 협상능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신뢰성, 정밀성, 내구성 등을 요하는 업종의 특성상 다른 산업, 특히 중화학공업에 관련과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며 외화절약 및 기술인력 양성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과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점이 방위산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업계의 입장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 정책측면

국가 안보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퇴조되는 가운데 정부로서는 지난 수년간 관련부서와 여론의 압력하에서 소모국방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이 점에 대해 관계당국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산물자의 조변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영수지

오늘날 우리의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가동을 저하와 기술개발 의지의 상실 등 여러 과제를 타개해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방산육성 意志의 提高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산물자 조달계획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격한 고도정밀병기 편중 정책에 따른 보완책과 防産전용시설에 대한 지원 육성책 및 수출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국방연구개발은 분야별로 정부주도개발과 업체주도개발이 구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함께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화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첨단 정밀무기의 개발 역시 관련기술의 부족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등으로 체제정비 등 기반 구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풍산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탄약류



**\* 산업적 측면**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군 수요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의 가동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수조달을 위한 재원의 제한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방산업체는 국내 제조업의 평균 가동율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병기수요에 대한 급격한 감소 추세로 국내 방위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재래식 방산업체의 존립기반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병기 생산업체는 정부 정책이 급격히 고도정밀무기로 편중됨으로써 이에 대처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防産전용시설의 경우에는 업종전환이 불가능하여 유희(遊休) 시설이 급증하고 기술인력을 계속 유지할수 없는 상황이며, 대량 減員시에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위산업체의 기술과 기술인력의 급격한 이탈현상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방위산업이 점차 고도정밀무기체제로 전환되는 추세하에서도 방위산업에 관해 이미 축적된 기술기반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방위산업은 업종의 퇴조로 지속적인 기술축적이 곤란한 실정이며, 타업종의 고임금 등으로 기술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방위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노사분규와 근로자들의 욕구 수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방위산업은 헌법과 관련법으로 노동쟁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법쟁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자체 능력만으로 대처할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제 3국에 대한 수출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내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代案)으로 제 3국 수출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우리 방산물자의 대부분이 미국식 체계이고, 독자 개발품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며, 미국의 수출통제와 수

출로알티 부과로 사실상 수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탈냉전과 군비축소의 추세에 따라 세계무기 교역시장은 89년도 335억불(26조8천억원) 규모에서 90년도에는 217억불(17조4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나, 국내 방위 산업체의 임금상승등으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 국방연구개발 측면**

고도정밀무기의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병기의 성능개량사업에도 막대한 재원(財源)이 소요되나, 업계는 경영수지 악화로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품에 대한 경제성있는 中·長期 물량 보장도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제도적으로 개발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의지와 노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위산업의 과제

첫째, 지속적인 防産育成 意志가 提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자산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대책으로서, 비교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군비(軍備)축소론을 경계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 과학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는 고용구조상 인구의 12.9%를 점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해, 국가안보는 전체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방산물자와 국내개발 가능한 물자의 해외수입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長期적이고 安定적인 방산물자 調達計劃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산물자 조달계획이 단기적이거나 수시로 변경된다면, 방산업체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설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防産振興會가 발행하는 月刊〈국방과 기술〉誌에 관계당국자께서 정부의 長期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선보이겠다고 언급하신데 대해 환영하며, 그 기대가 큼니다.

셋째, 급격한 고도정밀병기 편중 정책에 따른 보완책과 防産전용시설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고도정밀병기 개발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발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기본병기 생산업체가 정책의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의 가동률 유지 등 점진적인 전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수(民需)체제로서의 전용이 곤란한 방산전용시설의 경우 유희(遊休)설비와 유희인원에 대한 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9조 보조금의 교부 등 조항 및 同 시행령 제 26조 2항에는 “정부의 방산물자 조달의 중단이나 발주량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유희화되고 있는 전용기기의 유지비와 노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Defense Industrial Base 시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방산물자중 필수품목 및 기본화기 등을 분류하여 정부차원의 유지 육성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防産 專門系列化 지정으로 업체간 과잉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넷째, 제한된 국내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輸出支援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防産수출금융제도의 확대방안으로 연불(延拂)수출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수요 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 수출수요(輸出需要)의 발생시 軍보유물량을 무상대여(無償貸與)하고 수출후에 현물상환(現物償還)하는 제도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淸美 동의를제도에 대하여 대상품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매 件別 동의를신청제도가 폐지되거나 품목별 연간 셀링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國防研究開發에 대한 지원 및 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부주도개발로부터 업체주도개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구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자, 통신과 같은 고도정밀병기 및 장비분야중 민수부문과 호환성이나 연계성이 있는 업종은 업체주도로 전환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재래식 防産전용분야는 수요의 한계성으로 현행 개발체계하에서 정부주도 업체 참여 개발의 과도적 형태가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방안은 모든 방산업체에게 무한경쟁을 유도할때, 과당경쟁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의 淸外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중복투자, 과잉투자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직접 방산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은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방산기술과 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